

농지개혁의 공(功)을 이승만에게 돌려도 될까?

전 강 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 요약 》

최근 농지개혁을 상찬하는 극우 인사들이 많은데 이는 이승만 띄우기 작업의 일환이다. 이승만은 독립운동가로서 자격 미달이었고, 해방 후 정치 지도자로서도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에게서 업적이라 칭할만한 것이 있는지 애써 찾아보면 겨우 농지개혁이 눈에 띈다. 1980년대까지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농지개혁이 한국의 '공평한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토대였음이 드러나자, 극우 인사들은 그것을 이승만의 공(功)으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농지개혁에 관한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승만은 미국의 강한 압력 아래 농민층을 지지세력으로 확보할 전략적 목적으로 농지개혁을 추진했을 뿐이다. 그에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응당 돌아갈 형식적 공로 정도다. 농지개혁의 실질적 공로는 조봉암 초대 농림부 장관, 강정택 농림부 차관, 강진국 농지국장 등에게 돌려야 마땅하다. 이들은 당시 한국 농촌문제에 정통한 최고의 인재들이었고 농민층을 지주-소작 관계에서 해방하려는 사명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만든 농지개혁법 초안은 농지개혁법 제정 과정에서 강력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고, 그 법이 실시된 결과 한국은 단번에 '대지주의 나라'에서 '소농의 나라'로 변모했다.

농지개혁에 대한 자가당착적 상찬

요즘 1950년에 단행된 농지개혁을 상찬하는 극우 인사들이 적지 않게 보인다. 2010년대 후반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이론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농지개혁 상찬의 물꼬를 튼 이후, 그의 뒤를 잇는 목소리가 간간이 이어지더니 윤석열 정권 출범 후에는 그 목소리가 급격히 강해져서, 최근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까지 그 대열에 가세했다. 올 2월 초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에서는 농지개혁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발판이 됐음을 강조하며 농지개혁 상찬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이런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나는 참 기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유상 방식이기는 했지만, 해방 직후 대표적 자산가였던 지주들의 땅을 강제로 몰수해서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분배한 엄청난 개혁을 보수 인사들이 나서서 지지하니 말이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토지와 부동산은 대표적인 자산이고 그 분배는 극도로 불평등하다. 현재 한국 사회의 최대 질곡이라 일컬어지는 불평등과 양극화는 여기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만일 어떤 정치세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0년대 농지개혁 방식으로 토지와 부동산을 유상몰수-유상분배하겠다고 한다면, 농지개혁을 상찬하던 인사들은 태도를 바꾸어 사생결단 반대할 것이다. 대표적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정규재는 지금 보수세력이 농지개혁을 상찬하는 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 그는 농지개혁을 ‘좌익적 대안’이라고 단정하고 한국의 보수세력이 그런 정책을 상찬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탄식한다.

최근 극우 인사들은 왜 좌익적 대안이라고까지 매도당하는 농지개혁을 애써 띄우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승만을 띄우기 위해서다. 이영훈 교수를 필두로 뉴라이트 세력이 ‘이승만 띄우기’ 작전을 벌이기 전만 해도

이승만은 단지 4.19혁명으로 쫓겨나 하와이에서 인생을 마감한 독재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 인식이었다.

사실 이런 부정적 인식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에 의해 대통령 탄핵을 당할 정도로 독립운동가로서 자격 미달이었으며, 미국조차 생각지 않고 있던 남한 단독정부를 주장해 남북 분단을 초래했고, 해방정국과 6.25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양민학살에도 책임이 있었다.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 조직된 반민특위를 해산하는 대신, 거꾸로 친일파를 중용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삼았다. 이북에서 내려온 서북청년단이 수많은 애국 시민들을 고문·살해하는 것을 방치·조장하기도 했다. 선거 승리를 위해 온갖 부정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집권 연장을 목적으로 한 개헌도 두 차례나 감행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기도 했다.¹⁾ 4.19혁명 당시 꽃다운 청년들에게 발표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책임도 결국 이승만에게 있었다. 12년을 집권하는 동안 경제정책이라고 부를만한 것이 시행되지 않았으니 195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이 지체되는 것은 당연했다. 이승만에게는 그저 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제원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최대의 과제였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승만이라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하나라도 유익을 끼친 일이 있는지 찾아보기 마련이다. 이렇게 추적해보면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찾기가 어렵고, 겨우 눈에 띄는 것이 농지개혁임을 알게 된다. 요즘 극우 인사들이 농지개혁을 상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개혁이 철저하지 못해서 기존 지주층이 기득권을

1) 김삼웅, 2020, 『이승만 평전』, 두레; 이정우, “이승만 기념관을 반대함”, <영남일보> 2023. 11. 21.

지킬 수 있었고, 지주-소작 관계도 온존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실증연구가 심화하면서 농지개혁은 지주제를 해체하고 자연농 중심의 사회를 구축함으로써 고도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음이 드러났다. 외국에서도 이 새로운 견해가 사실이었음을 논증하는 연구들이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그림 1]이다. 이 그림은 전세계 26개국을 대상으로, 1960년 무렵의 토지분배 상태를 지니계수로 추산하여 가로축에 표시하고, 각 나라의 1960~2000년 장기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세로축에 표시한 것이다. 1960년 무렵 한국의 토지분배 지니계수는 0.3을 약간 초과하는 수준으로, 분석 대상 26개국 가운데 토지분배가 최고로 평등했음을 말해준다. 대만과 일본의 토지분배도 상당히 평등했는데, 그것은 두 나라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상몰수-유상분배 방식의 농지개혁을 단행한 결과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사한 농지개혁에 성공한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높은 장기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림의 좌하 쪽에 토지독점이 심각했음에도 토지개혁에 실패한 중남미 국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니계수가 0.9에 달해 토지분배가 극도로 불평등했던 이들 중남미 국가의 장기 경제성장률은 극히 낮았다. 그렇다면 1960년 무렵 각 나라의 토지분배 상태와 그 후의 장기 경제성장률 사이에는 뚜렷한 연관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농지개혁에 관한 실증연구들은 농지개혁으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교육이 발전해 우수 노동력이 대거 양성되었으며, 신형 자본가의 출현이 촉진되었음을 입증했다. 특히 유종성(2016)에 따르면 농지개혁은 일거에 자산과 소득의 평등성을 실현해 외국 학계가 주목하는 ‘공평한 고도성장’의 기초를 닦았다.²⁾

[그림 1] 1960년 무렵 토지 소유 평등도와 1960~2000년간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출처: Deininger, 2003, Land Policies for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World Bank Policy Research Report, p. 18.

이처럼 농지개혁이 놀라운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것이 이승만 치하에서 이뤄졌음을 새삼 자각하면서 뉴라이트들은 농지개혁을 이승만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포장하기 시작했다(그것이 자가당착적인 결정이었음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 있다). 극우 세력이 자기 발등을 찌는 이상한 결론을 마구 유포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한 가지 짚어 봐야 할 일이 있다. 농지개혁의 시행을 이승만의 공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물론 당시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으니 농지개혁 성공의 공을 오로지 이승만에게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승만의 몫은 국정 최고책임자에게 응당 돌아가는 ‘형식적인 공로’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실과 정황이 존재한다.

이승만에게는 형식적인 공로밖에 인정하기 어려워

2) 유종성, 2016, 『동아시아 부패의 기원』, 동아시아.

첫째, 당시 이승만 정권은 농지개혁의 시행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외부적 압력을 받고 있었다. 하나는 미국의 압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한으로부터의 압력이었다. 미국은 남한을 반공의 보루로 여겼고, 그래서 남한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확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해 그들의 마음을 잡아두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미국은 미 군정기에 귀속농지를 불하하여 농지개혁의 흐름을 불가역적으로 만들었으며, 한국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각종 채널을 통해 농지개혁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요컨대 농지개혁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일환이었고, 이승만은 거기에 충실히 부응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농지개혁 시행의 실질적인 공로는 이승만이 아니라 미국에 돌려야 맞다.

앞의 요인과 관련이 있는데 북한으로부터의 압력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은 1946년 3월 한 달 만에 무상몰수-무상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남한 정부가 농지개혁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남한 농민들의 마음이 북한과 공산주의 쪽으로 쏠릴 위험성이 있었다. 미국의 강한 압박이 존재하는 가운데 북한이 이미 급진적인 토지개혁을 단행했으니 이승만에게는 다른 선택이 존재할 수 없었다.

둘째, 이승만은 농지개혁을 신생 독립국의 장기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정략의 도구로 취급했다. 당시 지주들이 집결한 한민당(민국당)과 대결 구도에 놓여 있던 이승만은 자신을 지지할 사회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다수의 농민은 이미 북한이 급진적인 토지개혁을 단행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남한 농민층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농지를 분배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승만은 생각했다. 요컨대 “이승만에게 농민은 포섭과 장악의 대상이었지, 존중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는 농민 유인 전략 중 하나로 농지개혁을 서둘렀지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개혁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³⁾ 이승만이, 공산주의자였고 여전히 혁신적 입장을 가졌던 조봉암을 초대 농림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봐야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1948년 8월 4일 자로 로버트 올리버(Robert T. Oliver: 미국 시라큐스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1942~1960년 이승만의 정치고문이었다)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봉암을 임명한 목적을 “농민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승만은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0년 10월에 농지개혁 1년 연기를 결정했다가 미국 측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여 며칠 만에 입장을 바꾼 일도 있다. 미국 CIA는 이승만의 연기 결정을 농지개혁을 지연·폐기하려는 지주층의 압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했다.⁴⁾ 요컨대 이승만은 애초부터 정치공학 차원에서 농지개혁 문제에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호지부지 중단해버릴 생각까지 품었던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농지개혁의 실질적 공로를 돌릴 수 있겠는가?

셋째, ‘흑심’을 품고 농지개혁을 다뤘던 이승만과는 달리 조봉암 이하 초대 농림부 농지개혁팀은 애국심과 실력을 갖춘 뛰어난 인물들로 구성됐다. 조봉암은 농림부차관에 도쿄(東京)제대 조수(助手)를 지냈던 강정택을 임명했고, 농지개혁 실무를 책임질 농지국장에게 해방 전부터 농촌문제와 토지개혁을 깊이 연구해서 이미 유력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던 강진국을 임명했다. 농지국장 아래에 세 명의 과장(지정과장 윤택중, 분배과장 배기철, 사정과장 안창수)이 있었는데, 그들도 모두 농지문제에 일가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3) 김일영, 2006, “농지개혁을 둘러싼 신화의 해체”, 박지향 외 엮음,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2』, 책세상, 303쪽.

4) 정병준, 2003, “한국 농지개혁 재검토”, 『역사비평』 65, 137쪽.

농지개혁 성공의 실질적인 공로자들: 강정택과 강진국

조봉암의 인품과 실력, 활약상은 많이 알려졌지만, 그와 함께 농지개혁안을 마련했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강정택과 강진국을 잠깐 소개하고자 한다.

강정택은 대구고보(현재의 경북중·고)를 졸업하고 일본에 건너가 일본인들도 들어가기 어려웠던 제이고, 도쿄(東京)제대를 졸업한 천재였다. 가난했던 그가 일본 유학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그의 비범함을 알아본 시부사와 에이치(渋沢栄一)와 그 손자 시부사와 게이조(渋沢敬三)의 후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두 사람은 모두 일본 재계의 거물이었다. 특히 시부사와 게이조는 전전에는 도쿄저축은행 회장, 경성전기 대표, 일본은행 총재 등을 역임했으며, 전후에는 초대 대장성 대신을 맡아서 재벌개혁을 주도했다).⁵⁾

강정택은 1930년에 도쿄제대 농학부 농업경제학과에 진학했는데 그 결정에는 가난한 조국의 농촌을 살려내야겠다는 마음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1933년 도쿄제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바로 같은 학과 부수(副手)로 임명되어 연구를 계속했고 1939년에는 마침내 조수로 임명되었다(당시 일본에서 대학의 조수란 오늘날 한국 대학의 조교가 아니라 전임 교수였다). 그는 부수 시절인 1935~1939년 자신의 고향인 울산 달리를 중심으로 행해진 농촌 위생 조사와 농촌생활 조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1943년 3월 도쿄제대 조수직을 사임한 이후 조선으로 귀국했는데, 그때도 도쿄제대의 발령으로 3년간 '조선 농촌 경제사정에 관한 사항 조사' 프로젝트

를 위탁받아 진행했다.

해방 후 강정택은 경성제대가 이름을 바꾼 서울대학교의 법문학부 경제학과 교수(농업정책 담당)로 임용되었다. '국대안 파동' 때문에 경제학과 교수 6명이 함께 퇴진하고 학과가 폐지되는 바람에 강정택의 서울대 교수직은 반년여 만에 끝이 났지만, 그가 당시 학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아무튼 농지개혁을 준비하던 시기에 한국의 농촌 현실에 대해 강정택만큼 밝은 사람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한 후에는 민주주의민족전선 농업문제연구위원회 총책임위원을 맡기도 했고, 좌우합작위원회가 '합작 7원칙'을 마련할 때 토지개혁안을 작성하기도 했다.⁶⁾ 그러니까 농림부차관에 취임하기 전 강정택은 토지개혁에 관해 충분한 연구를 했고 나름의 개혁안까지 마련하고 있었던 셈이다. 강정택의 비범함을 알고 있던 조봉암은 한 달도 안 된 남봉순 차관서리를 퇴진시키고 그 자리에 강정택을 앉혀 농지개혁을 지휘하게 했다. 처음 조봉암의 요청을 받았을 때 강정택은 강하게 고사하며 고향 울산으로 피신해버렸지만, 조봉암은 삼고초려 끝에 겨우 그를 농림부차관에 앉힐 수 있었다.

그렇다면 농지국장 강진국은 어떤 사람일까? 강진국은 부산 동래 출생으로 니혼(日本)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후 귀국하여 조선의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투신했다. 1930년대에 사회개량주의 입장의 농촌문고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고, 해방 후에는 좌우합작·중간파 노선을 취했던 조선산업건설협의회에서 주요 실무를 담당했으며, 입법의원 산업노동위원회 산하 조선산업재건협의회에서 상무를 맡아 일했다. 그는 이미 일제 강점기에 유상매수·유상분배의 토지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중간파의 대안을 숙지하고 있었다.⁷⁾ 강진국은 농지국장에 임명된 후

5) 강정택의 전기로 이문웅, "강정택 선생의 생애와 학문세계"(이문웅 엮음, 2008, 『식민지 조선의 농촌사회와 농업경제』, YBMsisa)가 있다. 이 글의 강정택 관련 서술은 이 전기에 의존한 바가 크다.

6) 방기중, 2001, "농지개혁의 사상 전통과 농정 이념", 홍성찬 편, 『농지개혁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115쪽.

7) 같은 글, 108~111쪽 및 118~124쪽.

농지개혁 준비 작업으로 무려 두 달 동안 농촌 현지를 돌며 농촌 상황을 파악하고 농민들의 여론을 청취했다. 이런 작업을 거친 다음 강진국은 1949년 11월 19일과 20일 자신의 집에서 세 과장과 함께 밤을 꼬박 새워 농지개혁법 초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다시 강정택 차관과 이를 동안 재검토·수정했다.

농지개혁법의 초안(농림부안)의 특징

1950년 2월에 최종 통과되는 농지개혁법의 초안(농림부안)은 강정택과 강진국의 주도 아래 작성되었다. 농림부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⁸⁾

첫째, 농지의 몰수를 매수가 아니라 ‘징수’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농지를 제값을 주고 매수하지도, 무상으로 몰수하지도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즉, 유상매수-유상분배 방식과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의 중간 입장을 채택한 것이다. 이는 초대 농림부 농지개혁팀이 특이하게도 농지개혁의 헌법적 근거로서 헌법의 농지개혁 조항(제86조)보다 제15조를 더 앞세웠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제헌헌법 제15조는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공공목적에 필요한 사유재산의 강제수용 규정으로서, 농지개혁의 법적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조항을 더 앞세웠다는 것은 초대 농림부 농지개혁팀이 제3의 방식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지주 보상액을 평년작 생산량의

150%(3년 거치 후 10년간 균분 보상)로 규정했다. 지주 보상액 수준의 결정은 농지개혁법 제정 과정에서 최대의 논란거리였다. 지주 세력은 보상액을 높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으며 농민의 이해를 대변했던 국회 내 소장파 의원들은 이를 낮추기 위해 애를 썼다. 최종적으로 농지개혁법 개정 법률에 의해 확정된 지주 보상액은 농림부안과 동일한 150%였다. 지주세력이 포진하고 있던 국회 산업위원회는 처음 국회안을 만들 때는 지주 보상액을 300%로, 그리고 나중에 개정 법률안을 만들 때는 240%로 결정했다. 국회 산업위원회는 이처럼 지주 보상을 높이려는 이유를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지주를 산업자본가로 전환시킨다는 농지개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주들의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최종적으로 지주 보상액의 수준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혁신적 성향을 가진 국회 내 소장파 의원들의 활약 덕분이기도 했지만, 초대 농림부 농지개혁팀이 만든 농림부안이 강력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농지 가격이 일제 강점기에는 평년작 생산량의 500% 정도, 해방 후에는 300% 정도였음에 비추어, 평년작 생산량의 150%라는 수준은 보상 가격으로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토지를 지주로부터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하는 방식의 토지개혁에서 최대 난제는 토지 확보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초대 농림부 농지개혁팀은 바로 이 개혁의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것이다.

셋째, 농민의 지가 상환액은 더 낮추어서 120%(매년 20%씩 6년간 상환)로 하고 상환 기간 중에는 국세 등을 면제하여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다. 이 120% 조항은 1949년 6월 공포된 농지개혁법에서는 125%로 조정되었다가, 정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농지개혁법 개정 법률에서 150%로 상향 조

8) 전강수, 2019,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여문책, 54~56쪽.

정되었다. 그리고 상환 기간 중에 국세 등을 면제하여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던 조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에 의해 제안되었지만 부결되고 말았다.

위에서 확인되는 농림부안의 친농민적·반지주적 성격은 실제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많이 완화되었다. 하지만 핵심은 살아남았고, 그 덕분에 단기간에 ‘대지주의 나라’를 ‘소농의 나라’로 변모시키는 엄청난 개혁이 저렴한 사회적 비용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내게 되는 농지개혁법의 성립에는 조봉암의 확고한 의지(그는 농림부장관을 그만둔 후에도 국회에서 소장파 의원들을 이끌며 지주층의 방해를 막아내고 제대로 된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와 강정책과 강진국의 뛰어난 현실인식·경험·능력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제 농지개혁의 실질적인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야 할지 분명해졌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이승만 정권이 농지개혁의 주역 조봉암을 간첩혐의를 씌워 사형시켰다는 점이다. 조봉암의 엄청난 기여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면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악행이었다. 그러니 어떻게 농지개혁의 공로를 이승만에게 돌릴 수가 있겠는가?

| 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실련 토지구획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1987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경제학과 부동산정책을 가르쳤다. 지금은 대구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로 집필과 번역에 전념하고 있다.